



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(COP18)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

2013. 3.13

지식경제부
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

목 차

1 COP18 회의 개요

2 COP18 주요 결과

3 향후 대응 방향



1. COP18 회의 개요

회의 개요

- 일시/장소 : '12.11.26(월)~12.8(토), 카타르 도하
- 참석 : 192개국 정부대표, 국제기구, NGO, 언론 등 약 9천 여명 참가
- 국내 참석자 : 환경부장관(수석대표), 기재부장관, 녹색위, 지경부(정양호 국장 등),
외교부, 환경부, 기재부, 국토부, 기상청, 산림청 등 100여명
- 산업계(대한상의, 업종별 담당자 등 30여명), 시민단체, 언론사 등

주요 의제

- AWG-KP : 교토 의정서 2차 공약기간 이행체제에 관한 협상 프로세스
- AWG-LCA : 선-개도국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협상 프로세스
- 공유비전, 감축, 적응, 재정, 기술이전, 검토 등
- AWG-DP(ADP) : Post-2020 신기후체제 설립 및 Pre-2020 감축의욕 상향에 관한 협상 프로세스



2. COP18 주요 결과

도하 결과물(Doha Climate Gateway) 채택

- **의정서 개정을 통한 교토의정서 연장(2013~2020)**
 - 1차 공약기간(2008~2012) 종료 후 2차 공약기간(2012~2020) 지속
- **더반플랫폼(AWG-DP, ADP) 작업계획 수립**
 - 2015년까지의 협상 완료를 목표로 논의 일정, 내용 등 개괄적 구조 합의
- **선-개도국 장기협력행동(AWG-LCA) 협상 트랙 종료**
 - 개도국 지원과 관련된 기술이전, 재정, 능력형성 등에 대한 성과 없이 미완성의 종료
- **재정**
 - GCF 사무국 유치 결정 최종 인준, 장기재원 조성계획을 COP19까지 제출기로 합의
- **손실과 피해(Loss and Damage) 관련 국제적 메커니즘 설립**

교토의정서 연장(AWG-KP)

- 2차 공약기간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
 - EU 등 유럽, 호주가 2차 공약기간에 참여(총 38개국)
 - 미국(KP 미비준), 캐나다(2012년 말 탈퇴), 일본, 러시아, 뉴질랜드(KP 잔류) 불참, 2차 공약기간 신규 4개국(카자흐, 몰타, 벨라루스, 사이프러스) 추가로 전체 38개국 참여
 - 길이는 8년(2013~2020), 2014년에 목표 상향 검토
 - 현재 목표가 낮으므로 2014년에 목표 상향을 검토하기로 합의
 - 잉여배출권 구입 제한에 대한 정치적 선언 포함
 - 러시아, 우크라이나, 벨라루스가 끝까지 반발
 - 교토메커니즘 활용 자격, 잠정 적용 등도 처리
- 교토의정서 체제를 약화된 상태로 보전
 - 참여국의 배출량 비중(전세계 배출량의 15%, 1차 기간에는 25% 수준), 목표수준 (Bottom-up 방식으로 제출, 1차 기간에는 Top-down) 등에서 크게 약화
 - 다자간 규칙기반(rules-based) 체제 지속에 의의
 - KP의 자산을 post-2020으로 넘기는 transitional period

더반플랫폼(AWG-DP, ADP) 협상 향후 작업계획 수립

-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설립 및 2020년 이전 전 지구적 감축 노력 상향을 위한 2015년까지의 작업계획, 논의주제를 선정
 - 2012년 상반기에 협상 개시, 신기후체제의 원칙, 내용에 관한 개념적 논의 진행
 - 2013년부터 구체적 논의 및 협상이 진행될 전망
 - 부속기구회의(6월), 당사국총회(11월) 외에 추가회의(1~2회) 개최 확정
 - Post-2020 관련 논의주제(기후변화협약의 원칙, 신기후변화체제 합의문의 범위, 구조, 디자인 등)
 - Pre-2020 관련 논의주제(감축 및 적응의 편익, 감축노력 상향의 장애요인과 인센티브, 이행지원을 위한 재정, 기술, 능력형성 등)
 - 2014년 협상문안 요소 검토, 정상급 회의 개최 추진(반기문 사무총장 제안)
 - 2015년 5월까지 협상문안 초안 완성 → 2015년말 협상 완료 예정

선-개도국 장기협력행동(AWG-LCA) 협상 트랙 종료

- 제13차 당사국총회(2007년, 발리) 이래 감축, 적응, 재정, 신규시장, 기술이전 등 기후변화 대응관련 주요 이슈별로 협상 진행, 당초 2009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지연
- 칸쿤 당사국총회(2010년), 더반 당사국총회(2011년) 이후 남은 이슈의 처리가 핵심과제
 - 쟁점이슈 : 재정지원 구체화, 협약 하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, 무역장벽 논의 등
-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관련 재정, 기술이전, 능력형성 등에 대한 구체적 성과 없이 논의 종료, 미결 과제로 남음
 - 미완결 논의를 이어갈 장소 지정 : 부속기수(SBI, SBSTA), 당사국총회 하 워크프로그램, 별도 기구(CTCN, TEC, GCF, 적응위원회 등)

재정 메커니즘 관련

- **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한국, 송도로 선택한 이사회의 결정을 인준(COP 결정문 11(c) 3조)**
 - GCF에 대한 법인격 부여, 특권·면제, 행정적 지원 등에 관해 한국과 이사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
 - 이사회는 GCF의 사업계획, 자원모금계획, 사무국 설치, 신탁기금 주관기관 선정 등 GCF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COP19(내년, 폴란드 바르샤바)까지 제출기로 함

- **중기 및 장기 자원**
 - 개도국의 향후 3년간(2013년~2015년) 총 600억 달러의 지원요구가 있었으나, 합의문에 반영되지 못함
 - 다만, 선진국이 2013년~2015년간 최소한 평균 단기재원(2010~2012년) 규모의(연간 100억불) 자원 조성을 장려한다는 표현만 삽입
 - 선진국은 2020년 1천억 달러 조성경로(pathways)에 대한 전략과 접근법을 담은 제안서를 COP에서 제출할 예정(장기 재원에 대한 워크프로그램 1년 연장 합의)

손실과 피해(Loss and Damage) 국제적 메커니즘 설립

- **군서도서국 및 최빈개도국이 요구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 설립을 결정(COP19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 예정)**
 - 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의 범위를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같은 서서히 진행되는 점진적 변화까지 포괄적으로 포함



3. 향후 대응방향

신기후변화 체제 협상 대비 전략 개발

- 2013년부터 2020년 이후 기후체제 설립 및 2020년 이전 감축의욕 상향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
- 감축 차별화 기준으로 적용할 국가별 고려요소에 대해 우리의 산업 구조,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여력 등을 감안*한 우리입장 마련 필요
 - * 인구, 에너지믹스, 재생에너지 잠재량,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, 조기감축 행동에 따른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 상승 등
- 유사 상황의 국가(싱가포르 등 like-minded countries)와의 공조체계 강화
-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외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폭넓게 파악하고 필요 시 참여

GCF 유치 국가로서 재정분야 관련 논의에 참여

- 2013년부터 재정분야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
 - 중기재정(2013~2020) 조성 규모, 선진국의 장기재원 조성계획, GCF 사업분야(감축, 적응), 개도국 지원모델 등
- GCF 유치국가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필요
 - 세부 이슈별로 우리나라의 입장 및 대응 논리를 마련하여 협상에서 적극적 의견 개진
 - 선-개도국의 가교역할로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재안 마련
 - ☞ 중기재정에 대한 로드맵 마련(개도국), GCF 이사회 및 사무국의 독립성 증진(선진국), 기금에의 개도국 접근성 제고와 능력배양 지원(개도국),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(선진국)

GCF 조기 출범 · 정착 지원

- GCF에 대한 법인격 부여, 특권면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, 국회비준 추진
- 재정 · 행정적 지원 등 공약사항 이행
 - 초기 운영비,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신탁기금, I-Tower 사무공간 지원 등
- 임시 사무국과의 협력채널 가동, 향후 GCF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

GCF 사업모델 및 능력배양 사업 방안 마련

- 사업모델, 조직구성, 직원규모 등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 마련 → 2013.3월 이사회시 우리입장 반영(이사국인 중국, 인도, 미국 등과 사전협의 추진)
- 개도국 능력배양 기금의 활용 방안 제시
 - 개도국 능력배양을 위한 한-개도국간 양자협력 사업 확대·연계로 향후 GCF 역할에 대한 모범 사례(Best Practice) 제시
 - ☞ 개도국 공무원·민간 전문가 인력양성, 녹색기술이전, 녹색비즈니스 발굴·MRV 능력지원,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·제도적 프레임워크 설계 지원 등

국내 기업의 개도국 녹색시장 진출

- 향후 GCF 사업에 우리 기업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출 지원체계 구축 필요
 - 개도국 프로젝트의 컨설팅- 금융 조달- 사업수행 전 과정에 걸친 ‘국내기업 진출 종합지원체계’ 구축 추진
- 관련부처 및 산업전문가의 GCF 사무국 파견 추진

GCF 정주여건 조성 및 관련 산업 클러스터화

- 경자구역 외국인 정주여건 관련제도 재정비 및 글로벌 수준에 맞는 정주여건 인프라 조성
 - 우수 외국학교 유치(교육), 우수 외국의료기관 유치(의료), 아트센터, 수변 레저시설, 복합 리조트 조성(문화)
- GCF 관련 서비스산업(금융, 국책연구기관, 컨설팅, 기업연구소 등)을 집적화하여 One-Stop Service 체계 구축
 - ☞ [지경부] ‘녹색기후기금 유치 계기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및 관련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’ 연구용역 수행 중(2012.11~12)



감사합니다.